

한국의 국사 (연구/교과서) 에서 이야기하는 동아시아

趙珖(서울시사편찬위원회 위원장 /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머리말

한국, 일본, 중국이 포함된 동아시아에서 역사를 둘러싼 분쟁이 어느 시기보다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각 국에서는 역사교육에 대한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우리는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북아시아 역사 갈등은 기본적으로 중국과 일본 역사교과서의 자민족 중심주의와 국가주의적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역시 여기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한국의 역사교과서도 일국사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다.¹⁾ 근래에 편찬되어 학교에 공급되었던 교과서, 그리고 학계의 일본관계사, 중국관계사 서술을 근거로 하여 경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전근대 중국에 대한 서술

우리에게 ‘중국’은 공간적으로 현재 중국 지역을 차지하던 나라들을 부르는 대명사다. 흥망성쇠를 거듭했던 중국 역대 왕조의 역사를 하나의 중국사로 인식하고, 전근대에서 동아시아의 패자는 늘 중국 지역에 세워졌던 나라들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중국 중심의 세계 인식이 한국사와 가장 심각하게 충돌하는 것은 고구려사 부분이다. 교과서에는 ‘고구려는 동북아시아의 패자로 군림하였다. 만주와 한반도에 걸친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정치제도를 완비한 대제국을 형성하여 중국과 대등한 지위에서 힘을 겨뤘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동북아시아란 중국을 뺀 동북아시아를 의미하는가. ‘중국과 대등한 지위’에서 말하는 중국은 어느 나라를 말하는가. 이런 고구려사를 둘러싼 혼란은 수와 당이 고구려를 정복하지 않고는 진정한 동아시아의 패자라 할 수 없어 거듭 전쟁을 도발했고, 그것이 고구려 멸망의 원인임에도, 신라가 강자 중국의 ‘당’과 연합하여 고구려를 멸망시켰다는 서술을 받아들이게 한다.

이러한 역사 인식은 일종의 ‘화이의식’에 근거한다. 이는 북방민족에 대한 서술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고려 시기부터는 거란, 여진은 침략을 일삼으며 은을 갖고 와서 농기구, 식량과 교환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정복하고 침략해도 상관없는 오랑캐일 뿐이다.

조선 시대 서술에서는 명과의 관계에서 다시 한 번 ‘선진문물을 흡수하려는 문화 외교’라는 서술이 등장한다. 북방민족인 여진에 대해서는 ‘회유와 토벌의 교린책’이란

1) 이상, 고영진, 「한국사 교과서에서 보이는 전근대 일본」, 『역사문화연구』 25, 2006에서 인용

표현이 등장한다. 그리고 청에 대한 설명 중 이런 서술이 나온다. ‘조선에 조공을 바쳤고 조선에서도 오랑캐로 여겨왔던 여진족이 세운 나라에 군신관계를 맺고 굴욕적인 항복을 했다는 것이 조선인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이후 오랑캐에 당한 수치를 씻고 임진왜란 때 도와준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 청에 복수하자는 북벌운동이 전개되었다.’ ‘청과 형식적인 사대관계를 맺었다.’ 게다가 청의 발전을 이렇게 설명한다. ‘중국의 전통 문화를 보호, 장려하고 서양의 문물까지 받아들여 문화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오랑캐인 여진족이 세운 청이 한족의 문화와 서구 문명을 결합하여 문화국가 가 되었으나 우리는 형식적인 사대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한족의 전통과 근대의 적자인 서구의 문명을 흡수하여 성공했지만 오랑캐는 오랑캐인 것이다.²⁾

2. 전근대 일본에 대한 서술

전근대의 중국에 대한 서술에서는 중국이라는 대명사가 자주 등장하는 반면, ‘일본’이란 단어 사용에 인색하다. 왜, 혹은 왜구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본래 일본이라는 국명은 왜국이 7세기 후반 바뀌면서 등장한 것이었다. 그런데 교과서에는 백제는 일본 큐슈 지방에 ‘진출’했고, 변한은 왜에 철을 수출했고, 백제부흥운동에서는 다시 왜의 수군이 백제부흥군을 지원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왜와 일본의 경계선이 모호하다.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문화를 설명할 때는 일본이라는 국명만을 일관되게 사용한다. ‘삼국문화는 일본에 전파되어 일본 고대 문화 성립과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결론이고 그 구체적 내용이 있다. 그런데, 고려시기로 오면 일본은 사라지고 왜구만 등장한다. 왜구에 대한 정의는 없다. 왜구의 고려에 대한 침략의 역사만을 서술한다. 일본의 중앙정권에 대한 서술은 보이지 않는다.

조선시기도 일본과의 관계는 왜구로 시작된다. 계속된 왜구 약탈에 쓰시마를 정벌했다. 고 한다. ‘대마도 정벌’(혹은 기해동정)은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침략이다. 우리의 이중 잣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일본은 침략했고, 우리는 토벌하고 진출했다. 물론 ‘임진왜란’과 일제의 식민지 지배는 침략의 정도를 비교할 수는 없다. ‘대마도 정벌’ 이후 왜구의 요구를 받아들여 3포를 개항했다는 서술이 이어진다.³⁾

임진왜란은 조선의 땅에서 조선과 명이 일본과 싸운 전쟁이다. 즉 세 나라가 공유하는 역사이다. 현대 한국 학계에서 임진전쟁은 일본의 침략에 대한 민족적 저항과 극복이라는 ‘경험의 역사’로 여겨졌고 가장 뜨거운 관심이 기울여진 연구 분야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임진전쟁에 대한 연구는 일본의 침략으로 인한 고통을 정서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와 같았다. 대외 팽창기의 일본이 이 전쟁을 침략 전쟁의 필연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였다면, 한국의 입장에서 임진전쟁

2) 김정인, 「동아시아사의 재구성 : 고등학교『국사』·『한국근·현대사』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학술대회지』, 2008에서 인용

3) 김정인, 「동아시아사의 재구성 : 고등학교『국사』·『한국근·현대사』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학술대회지』, 2008

연구는 식민지배로 인한 고통을 덜기 위한 분야였던 것이다.

연구 주제로서는 의병들의 활동과 이순신의 해전에 대한 것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같은 연구사적 경향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양반이나 일반 백성, 그리고 이순신 등의 영웅 덕분에 전쟁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공통된 시각을 보인다. 이들의 활약은 물론 역사적 사실이었으나 무능한 정부-일본의 침략-영웅들에 의한 극복이라는 구도가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었다. 개별 주제를 넘어 통사적인 임진전쟁 연구도 진행되었으나,⁴⁾ 위와 같은 구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처럼 오랜 정치적·사회적 폐단으로 인해 조선 조정이 침략에 대처할 수 없었다거나, 조선 조정이 수도까지 버리기에 이르렀으나 의병과 전쟁 영웅의 활약 덕분에 극복할 수 있었다는 평가는 사실 유성룡의 『懲毖錄』 등 조선의 역사서에서 보인 상투적인 내용이다. 그런데 이 부분만을 떼어 놓고 보자면 2차 세계대전 종결 이전 일본의 연구도 유사한 서술방식을 취하고 있었다.⁵⁾ 이들 연구는 각각 시대의 필요에 의해 다른 목적하에서 만들어졌으나, 결과적으로 보자면 유사한 방식으로 전쟁을 서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시각이 지닌 문제를 지적하였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⁶⁾ 그러나 이러한 연구 역시 한국의 임진전쟁사 연구가 승리와 패배, 선과 악, 선진과 후진을 논해야 한다는 관념에서 완전히 탈피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상과 같이 한국과 일본에서 이루어진 임진전쟁 연구사의 고전적 경향은 대개 강화교섭에 주목하지 않았다. 강화교섭을 서술한다 할지라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무리한 요구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명 조정의 책봉이라는 간극을 메우기 위한 기만에서 비롯된 실패로만 그릴 뿐이었다. 강화교섭은 전쟁에 대한 유용한 설명틀로 사용될 수 있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 삼국의 역학구도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

4) 崔永禧, 「壬辰義兵의 性格」, 『史學研究』 8, 1960 ; 李相佰, 『第2編 第6章 倭亂과 對外關係』, 『(震檀學會)韓國史』 近世前期篇, 乙酉文化史, 1962 ; 최영희, 『임진왜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4 ; 金錫禧, 「壬辰亂 中の 講和交渉에 對한 小考」, 『文理大學報』 9, 釜山大學校 文理科大學, 1966 ; 李炯錫, 『壬辰戰亂史』 上·下, 壬辰戰亂刊行委員會, 1967 (李炯錫, 『壬辰戰亂史』 上·中·下, 新現實社, 1974 등으로 증보개정) ; 李鉉淙·崔永禧, 「外族의 侵寇 1.16世紀後半期 東亞의 情勢, 2.日本의 侵寇」, 『한국사 12 조선양반사회의 모순과 대외항쟁』, 국사편찬위원회, 1977 ; 최영희·송정현·조원래·손종성·이장희·장학근, 『임진왜란』, 『한국사 29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국사편찬위원회, 1995

5) 일본의 침략과 전쟁 초반 조선의 참패에는 정치가 문란하고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은 조선의 책임도 있다는 식의 서술은 『兩朝平攘錄』 『懲毖錄』 『武備志』 이래, 이러한 저작을 접한 이후 서술된 일본의 문헌들에도 받아들여졌다. [김시덕, 「근세 일본의 대외전쟁 문헌군에 대하여」, 『임진왜란 관련 일본 문헌 해제』, 도서출판 문, 2010 (金時德, 『異國征伐戰記の世界: 韓半島·琉球列島·蝦夷地』, 笠間書院, 2010의 요약)] 이러한 논리는 19세기 후반 이후 일본의 대외팽창과 침략전쟁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저술에 이용되었다. 그리고 해방 이후 한국학계는 회귀와 반복을 통해 위와 같은 서술을 재생산해왔다.

6) 許善道, 「壬辰倭亂論 -올바르고 새로운 認識-」, 『千寬宇先生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 正音文化社, 1985 ; 崔永禧, 「壬辰倭亂의 再照明」, 『國史館論叢』 30, 1991 ; 崔永禧, 「壬辰倭亂에 對한 理解의 問題點」, 『韓國史論』 22, 國史編纂委員會, 1992 ; 崔永禧, 「壬辰倭亂에 對한 몇 가지 意見」, 『南冥學研究』 7, 1998

음에도 대체로 그러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

강화교섭이 이처럼 도외시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일본의 대외 팽창이 진행되던 시기의 연구에서 강화교섭은 일종의 치부로서 서술되었다. 이 시기의 연구는 중국을 침략의 대상으로 삼았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야망을 꺾기에 이르는 과정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고, ‘원정’의 실패는 강화교섭을 담당자 자신의 거짓 때문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강화교섭은 연구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온전히 부여받지 못했던 것이다. 해방 후 한국 학계에서는 국난극복사라는 연구 경향 속에서 조선이 일방적으로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호소가 요구되었고, 조선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그리고 복수전을 방해한 강화교섭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2차 세계대전 패전 후의 일본에서는 전쟁에 대한 부정적 인식,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의 분위기를 반영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강화교섭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외면당하거나 이전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서술방식을 반복하고 있었다. 해방 후 한일 양국의 연구사적 분위기는 모두 강화교섭 그 자체를 연구하는 것을 꺼리고 있었다. 국적을 불문하고 사람들은 원하는 전쟁의 모습과 다른 방향의 흐름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고 강화교섭에 관련한 많은 사료들이 주목받지 못했다.

한편 위의 연구들을 비롯하여 임진전쟁 당시 조선과 명 사이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대개 명이 조선에 참전한 중요한 이유가 일본군의 침략을 조선 영토에서 저지하여 자국 영토를 보호한다는 것에 있었음을 강조하였으며, 전쟁 기간 동안 조선에 자국의 논리를 강요하였던 명과 그로 인해 피해를 입고 저항하려했던 조선이라는 구도 위에서 서술되었다.⁷⁾

한편,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임진·정유 전쟁과 정묘·병자 전쟁은 한국사 연구와 교육에서 말하는 ‘임진왜란’, ‘병자호란’이다. 이렇게 다른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은 이 전쟁에서 배워야 할 것을 다르게 잡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사는 ‘갈등 해소와 평화추구’를 궁극적인 교육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임진·정유 전쟁과 정묘·병자 전쟁을 배우면서 평화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전쟁의 배경과 발생원인, 전쟁의 피해 등은 교육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사의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은 전쟁을 배우면서 평화를 생각할 수 없었는데, 그 결정적 이유는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교과서의 집필기준에 있었다. 성취기준과 집필기준에서 전쟁의 원인보다는 전쟁의 영향에 대한 이해를, 그리고 전쟁의 영향에서는 전쟁의 피해에 못지않게 문화적 측면에서의 전쟁의 긍정적 영향을 학습하도록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교육과정이 개정될수록 과목 신설을 결정한 정부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는 가운데,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은 전근대사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동질성이 형성되고 지속되는 것을, 근현대사에서는 지역의 현존 갈등을 해소하는 것을 각각 강조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새로 개정될 교육과정에서는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이라는 내용요소에 대해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이 일어난 원인과 영향을 동아시아 국제 관계와 각국의 정치, 사회를 고려하여 설명할 수 있다.”

7) 김경태, 「임진전쟁기 강화교섭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로 진술되어야 할 것이다.⁸⁾

교과서에서 조선통신사에 관한 서술 역시 편향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다. 교과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술이 보인다. ‘도쿠가와 막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쓰시마 도주를 통하여 조선에 국교 재개를 요청하였다’, ‘일본은 조선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고 도쿠가와막부의 쇼군이 바뀔 때마다 그 권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조선에 사절 파견을 요청하였다’ ‘통신사는 외교 사절로서 뿐만 아니라 조선의 선진 문화를 일본에 전파하는 역할도 하였다’ 여전히 일본은 조선의 선진 문화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서술은 개관의 17세기 이후 일본이 평화와 안정을 이루고 크게 발전했다고 하는 서술과 충돌한다. 일본이 네덜란드 등을 통해 서구문물을 수용하며 발전했지만, 여전히 조선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들여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인가. ‘근대의 세계’는 일본의 발전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19세기에 서양 열강과 타협하여 적극적인 근대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제국주의 열강의 대열에 끼이게 되었다’ 일본의 근대 발전을 타협이라는 명사와 끼인다는 피동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⁹⁾

전체적으로 교과서에 보이는 전근대 일본의 모습은 문화후진국으로서 선진문화의 수혜자, 침략자, 약탈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근현대의 식민지수탈론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수혜자, 침략자, 약탈자로서의 전근대 일본의 모습은 일면 타당한 점이 없지 않으나 정확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이러한 일본의 이미지가 교과서 발행과 서술제도 등 우리 내부의 잘못에서 비롯된 측면이 적지 않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을 하나의 관계 주체로 보지 않는 『국사』교과서의 일방향적인 인식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난제들을 해결하고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바람직한 한일 관계 서술은 과거 역사의 전개가 그랬듯이 일국사가 아닌 동아시아 전체의 넓은 시각에서 관계사적인 측면에서 서술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경계의 역사학’이 아닌 ‘관계의 역사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서양의 국제 역사교과서 협력 운동을 모범으로 삼아 한·중·일 3국의 양식 있는 학자와 교사, 시민단체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교과서의 교류와 협력 활동은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¹⁰⁾

3. 근대 동아시아에 대한 서술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물론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서 중국과 일본의 근현대사에 관한 내용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19세기 이후 동아시아는 일국의 상황만으로 자국

8) 차미희,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의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 분석」, 『한국사학보』 56, 2014에서 인용

9) 김정인, 「동아시아사의 재구성 : 고등학교『국사』·『한국근·현대사』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학술대회지』, 2008

10) 이상, 고영진, 「한국사 교과서에서 보이는 전근대 일본」, 『역사문화연구』 25, 2006

사를 기술하는 자체가 불가능 할 정도로 삼국의 역사가 상호 얽혀 있다. 그런데, 교과서는 이런 역사 현실을 유념해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강화도 조약을 비롯해 문호 개방을 하고 임오군란 당시 청에 원병을 청하는 과정부터 시작되는 근대사는 일본과 청이라는 상대의 대응이 어떤 '사정'에 나온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 그저 우리 역사 현실과 관련된 그들의 대응만을 현상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는데 왜 일본이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려고 했는지, 중국의 만주가 독립운동의 기지 역할을 했는데 왜 다른 나라 땅에서 독립운동이 가능했는지 설명해주지 않는다. 일본의 약탈성이 식민지화의 원인이었고, 식민 통치를 통해 재현되었다는 전제하에 현상적인 식민 지배와 그에 대한 우리의 저항만을 가르치고 있다. 상대가 약탈 국가 일본이니 더 알 필요가 없다는 의식이다.

현대사도 일본은 침략자, 중국은 독립운동의 기지이자 지원세력이라는 이미지만 현상적으로 반복되면서 동아시아 역사상 자체가 전무한 근대사와 사정이 대동소이하다. 1945년 이후 한(북한포함)중일 상호간에는 '단절'의 역사가 지속되었고 지금도 아직 이어지지 않은 역내 관계가 있다. 그리고 미국이 동아시아의 현실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술은 턱없이 부족하고, 우리 내부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하다. 세계 대부분 국가의 세계사 교육에 등장하는 대표적 국제전인 한국전쟁의 경우도 국제전에 참가한 각국의 논리가 소개되어 있지 않다. 미국, 소련, 중국은 물론 다른 나라들의 참전과 개입에 대한 설명이 인색하다. 다른 시대보다 근현대의 경우, 중국사는 물론 일본사와 연결 지어 설명해야 맥락의 이해가 가능함에도 이런 문제의식이, 다시 말해 동아시아라는 관점이 기존의 역사 교육에는 없다. 나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도 나를 돌아보게 하는 준거가 될 수 있다.¹¹⁾

앞으로 편찬될 역사교과서는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시아 주변국들에 대한 서술이 인류의 보편된 가치를 지향하며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1) 김영진, 「한국사 교과서에서 보이는 전근대 일본」, 『역사문화연구』 25, 2006